

NEWS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상생발전협정서 준수·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

▶1면 ‘윤 탄핵선고’서 계속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8주가 3시간씩 24시간 자리를 지키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더민초는 이런 비상행동을 적어도 오는 3일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며 “헌재가 합당한 결론을 낼 것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망의 문제이고,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국민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 야당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은 파면을 넘어 윤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 찬반 진영은 이날 날인종로 구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며 총력전에 들어갔다.

종교계도 거리로 나섰다. 28개 단체로 구성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도 오후 2시 삼정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윤 대통령 전임일지 파면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했다.

경찰, 현재 주변 ‘진공상태’ 집회 전면 금지, 차량 통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진공상태’를 완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장해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고일이 발표된 전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진공 작전’이 25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버스 160여대, 차벽트럭 20여대 등 총 200여대 차량이 동원됐다.

시위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인도 통행은 허용된다. 주변 상가나 자택, 회사도 평소와 같이 드나들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안 전달...시·GGM 수용 노조 측 “법리 검토·조합원 의견 등 취합 후 입장”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2일 ‘광주급로 별모터스(GGM)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을 권고했다.

이에 광주시와 사측인 GGM은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노조는 수용 여부를 향후 표명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노사민정 협의회는 2일 광주시청에서 제2차 협의회를 열고 GGM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을 GGM 노사와 광주시에 전달했다.

‘조정·중재안’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GGM 갈등으로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지난 1월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 총 9차례에 걸친 회의와 8개 기관·단체 의견청취를 거쳐 전원 합의로 마련됐다.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노동·경영·전문가·사회·행정분야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와 헌법

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한다’는 법규와 약속에 근거해 마련됐다.

조정·중재안은 GGM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노사민정 대타협 GGM설립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GGM 경영진에게는 노조와 상생협회의 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일 일괄공제(Check-off), 단체교섭 시 근무시간 면제 범위 확대(4시간→8시간), 공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및 신규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권고했다.

GGM 노동조합에는 35만대 생산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 노사상생협회의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권고했다.

광주시에에는 공동복지프로그램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으로 실질적 복지 확대,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지원의 현실적 수준 지원,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상설 상설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조정·중재안을 확정된 뒤 GGM 노사와 광주시에 전달하고, 성실한 이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태호 조정·중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의 3대 원칙 하에 당사자 간 공멸을 막고 광주 시민과 함께 약속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 세계 속 GGM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의 정신을 담았다”며 “GGM의 지속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위해 조정·중재안을

GGM 노사가 적극 수용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재안을 전달 받은 광주시와 GGM 경영진은 수용 의사를 곧바로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갈등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해 합리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적극 수용한다”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GGM 경영진, 노동조합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재안을 빠르게 수용하기

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측인 GGM도 중재안 입장문을 통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취지와 맞지 않은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수용하기로 했다”며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중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이후 수용 여부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여수시, 예비국제회의지구 선정

2027년까지 국비 지원... 국제회의의 중심도시 기대

여수시가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예비국제회의지구’는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확대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제회의의 개최 역량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한 제도다.

이번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돼 최대 2027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개선 방안과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해 왔다.

여수시는 지난해 1262건의 마이스(MICE) 행사로 방문객 42만여명을 유치 약 1475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이수·송원근 기자 smg331@

도,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불법 촬영기기 점검

시군·경찰 등 유관기관 공동 화장실·탈의실 편의시설 점검



전남도는 4월 개최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경기장 불법 촬영기기 이른바 ‘물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 20개 시군 대축전 담당부서, 시군 경찰서 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진다.

대축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20개 시군 57개 경기장 편의시설(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27일 대축전 종료 시까지 지속해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선수단과 관람객이 경기장을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탐지장비를 활용해 정밀 탐색하거나 육안으로 철저히 확인,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 경각심을 알리는 경고 스티커도 부착한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정보화 기술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증가하는 만큼 무엇보다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안전한 경기장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17개 시·도, 일본 선수단 2만여 명이 참가하며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산불 선제적 대응...자연공원 탐방로 통제

도, 내달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등 전면·부분 시행

전남도는 최근 경남·경북·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 조심 기간 도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 조심 기간은 5월 15일까지다. 전

남에선 자연공원 중 산악형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각 4개소가 지정돼 있다. 국립공원은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무등산이고, 도립공원은 조계산, 천관산, 두륜산, 불갑산이다.

불철 산불 조심 기간 지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통제는 도립공원 탐방로 27개

구간, 57.4km가 대상이다. 천관산도립공원 탐방로의 경우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조계산·두륜산·불갑산도립공원은 주요 탐방로 일부만 통제하며, 해당 공원관리청별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37개였던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구간을 지난 3월 31일부터 227개로 확대했으며, 국립공원 실시간 탐방통제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CO'S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CO'S

영리활동의 자유로운 선택

중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구름다리 옆

NAVER 나코스

062) 376-5425